

## 수입 농산물에 대한 부과금제도와 양축농가의 입장

정부가 이번 달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부과금제도」가 양축농가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부과금 징수 대상품목에 사료원료용 곡물이 포함될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양축농가들의 주장인즉 「수입 사료원료에 10%의 부과금을 징수하면 사료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부담은 전액 양축농가가 떠맡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또 양축농가들은 「현재 낙농·육우·양계분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과금제도를 시행하면 양축농가의 경영압박을 가중시켜 채산성을 더 어렵게 할 뿐」이라며, 「부과금 징수 대상품목에서 사료원료용 곡물만은 꼭 제외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축산 관계단체도 이에 대한 건의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최근 축산업계의 현안문제로 대두된 수입 농산물에 대한 부과금제도의 정부 방침을 잠시 검토해 보고 양축농가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정부는 지난 5월 22일 김만제 부총리 주재로 13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농어촌종합개

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농산물 수입 부과금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가칭 「농어촌개발특별기금법」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오는 88년까지 농어촌개발기금 5천억원을 재정자금 및 채권발행등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1천2백억원은 농산물 수입 부과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연차적으로 수입가격의 10% 범위에서 수입 부과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입 농산물로부터 징수하는 돈은 ▷농공지구 조성 ▷농어촌 관광단지 개발 ▷농어촌 도로 및 의료시설 확충 ▷농지구입 기금 ▷농수산 기술개발등 종합적인 농어촌 개발 사업을 펼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부과금을 우선 코피, 오렌지원액등 기호성 식품부터 징수하되 점진적으로 이를 전수입 농산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일반적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부과금제도는 자국의 농업 생산자를 보호하고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인 하나로 사용되는 제도이다. 외국에서는 벌써 50년대 이후부터 EC, 일본, 스웨덴등지에서 수입 농산물에 부과금을 매기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 제도를 시행한 후 괄목할만한 생산기반을 갖춰 EC의 경우 80년대 이후엔 곡물, 소, 돼지 분야에서 미국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을 정도이다. EC는 품목에 따라 15-166%의 수입부과금을 물리고 있고 부과금을 해당 품목 생산 기반확충등에 사용함으로써 순전히 농산물 수입 억제를 통한 자국민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C는 또 모든 수입 농산물에 부과금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곡물, 축산물, 청과물 및 일부 가공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우리 정부에서 검토중인 수입 농산물 부과금제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농산물 수입 억제제를 통한 농민보호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종합개발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키 위해 임시방편으로 이 제도를 계획했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수입 농산물에 농어촌개발을 떠맡긴 인상이 짙다.

우리나라는 연간 15억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중 2/3가 넘는 12억달러가 곡물이고 곡물중 61%에 해당하는 7억4천만달러가 사료원료용 곡물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가 수입되는 곡물에 부과금을 징수하면 양축가가 가장 많은 부담을 해야함은 자명한 이치다. 이것은 분명히 모순이다. 정부가 농어촌개발을 한다는 명분으로 계획중인 수입 부과금제도가 농민의 절대반대를 차지하고 있는 양축농가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이율배반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양축가는 외국에 비해 훨씬 높은 세금부담을 안고 있다. 일본은 사료원료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가 전혀 없고 대만은 옥수수에 3%의 관세, 대두박에 7%의 관세만을 물리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옥수수에 관세 7%·부가세 10%, 소맥에 관세 5%·부가세 10%, 대두박에 관세 10%·부가세 10%를 물리고 있다. 이와같이 인근 양돈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다시 10% 범위의 부과금을 징수한다면 국제경쟁력에 철퇴를 가하는 꼴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시장마저 축산물의 가격상승으로 소비가 둔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면 이와같은 결과가 예측 가능하다. 즉 사료원료 부과금 징수→사료 가격 인상→축산물 생산원가 상승→축산물 가격 인상→소비위축→농가소득 감소와 같은 결과를 나타낼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사료원료에 수입 부과금을 매길 때가 아니라 현재의 과중한 관세, 부가세를 인하해 축산업(특히 양돈산업)을 수출지향 산업으로 육성할 때라고 본다. 즉 정부는 수입 사료의 관세·부가세 인하→사료가격 인하→축산물 생산원가 절감→축산물 가격인하→국제경쟁력 향상→수출확대·소비확대→외화획득·국민보건향상을 추구할 때다. 현재는 사료곡물에 수입부과금을 논할때가 아니다.

또 솔직히 수입 사료곡물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해서 농공지구 조성, 농지구입기금 등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 단언한다. 만약 수입 사료곡물에 부과금을 매긴다면 당연히 그 돈은 가축의 생산기반 확충 사업 등에 쓰여져야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는 1천2백억원의 자금마련은 국고지원을 하거나 기호품, 가공품 등에 국한해야 옳다. 농어촌개발을 빌미삼아 양축농가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결코 안되겠다. 사료곡물에 10%의 부과금을 매기면 8.2%의 사료값 인상 요인이 생기고 전체 양축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약 6백 66억원에 달한다. [7억 4천만불(86년도 사료곡물 총 수입 예상 금액)×10% (부과금 징수율)×900원(환율) = 6백 66억원]

이 금액은 직접 부과금에 불과하고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둔화까지 감안한다면 그 금액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 부과금제도 시행에 앞서 과연 이 제도가 수입감소를 통한 농민을 위한 제도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농어촌개발을 위한 자금마련은 양축농민의 부담위에서가 아닌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양축농가의 희생을 통한 농어촌개발이란 있을 수도 없고 명분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으므로 수입 사료곡물에 부과금을 징수하는 계획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